

예상 웃도는 투표율… 깨끗하게 헤어지는 ‘합의이혼론’ 대두

국민의당 전당원투표 이틀째

국민의당이 28일 바른정당과 통합 여부에 관한 전(全)당원투표를 이틀째 실시하는 상황에서 ‘통합 찬성’으로 결론이 나올 경우 찬성과 반대파가 ‘합의이혼’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같은 방안은 양측의 헤어지는 모습이 나날 경우 국민에게 도리도 아니고 차후 정치상황이 변해서 다시 힘을 합칠 때를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 반대파는 물론 찬성과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선거인단 중 3만 8676명이 온라인투표에 참여하면서 투표율이 15.12%로 집계됐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지난 8·27 전당대회 이후 최종 투표율이 24.26%였던 점에 비교하면 초반 투표참여가 예상보다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대표를 뽑았던 (지난 전당대회 때의) 전당원 투표보다도 훨씬 더 높다”면서 “당원들이 당을 살리고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반색했다.

안 대표는 통합시 호남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대파 진영과 갈라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두고 “시너지가 나는 ‘덧셈통합’이 되면 의원들도 모두 다 푹푹 뭉칠 것이라고 본다”고 말하며 ‘합의이혼’ 가능성을 작게 봤다.

실제로 찬성과 측에서는 전당 투표율이 높게 나올수록 반통합파의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보이콧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대파 측에서 합당 안전 통과를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실효적 지지하겠다는 태세를

안 “당원들 당 살리기 관심”

물리적 충돌엔 공멸 공감대

강경 반대파 저지 의지 여전

통합 마무리까지 힘로 예상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는 협조가 예상된다. 전대 의장에 이상돈 의원, 부의장에 윤영일·이우호 의원 등 반대파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전대 개최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또 전당원투표 투표율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원래 첫날 70% 이상이 투표하는 경향이 많아 높은 투표율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대 개최 전에 반대파 지역구 의원들이 집단탈당하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자진 탈당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비례대표도 원한다면 안 대표 측에서 이들을 제명하는 방식으로 탈당을 용인해줘 양측이 ‘완원’할 수 있다는 것이 ‘합의이혼’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비례대표 의원은 “안 대표와 호남이 서로 이익을 위해 합쳤었지만, 이제 다른 목표를 위해 깨끗하게 헤어지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 당내 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론 통합 반대파 핵심 의원들은 공개적으로는 끝까지 통합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 노선에 반발해 당을 떠날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차라리 안 대표가 당을 떠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끝까지 농성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경기도 파주시 도라전망대를 찾아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통합 걸림돌’ 치우기?

호남계 당직자 계약연장 불가 통보…반대파 제거작업 시작 의혹

을 벌이며 ‘보수야합’을 저지하고 당을 지킨다고 버리고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도 벌어질 경우 양측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이혼’ 등 공생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물밑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ikpark@kwangju.co.kr

국민의당이 최근 연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호남계 당직자에게 계약연장 불가를 통보하면서 당 지도부 주도로 통합 반대파 제거 작업이 시작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안철수 대표 측이 바른정당과의 합당 이후를 염두에 두고 사무처 공석을 늘리는 동시에 통합반대파 측으로 분류되는 당직자를 숙이내며 진정체제 구축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중앙당 실국장 당직자 16명을 시·도당 역량강화를 명분으로 올 10. 12월 2차례에 걸쳐 내려보내고 공석 중인 자리 또한 바른정당과의 통합 전후로 안 대표 측 인물을 중점 배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지난 27일 구민주계로 분류되는 호남출신 당직자 A씨 사직했다. 그는 이날 김권영 사무총장으로부터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뜻을 전달받고 곧바로 일을 그만뒀다.

이 당직자의 계약기간은 연말까지였는데, 당내에서 해당 업무를 가장 오랫동안 해온 터라 그의 계약 종료 통보 소식

에 놀란 분위기다. 이를 기점으로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당직자 정리작업에 나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두 당이 통합하면 바른정당 측 당직자들도 합류하게 되는 만큼 현재 당직자 인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어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고 이러한 사정을 안철수 대표 측도 부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의당 중앙당 당직자는 70명 규모인데 이 가운데 계약직은 15명 수준이다.

안 대표 측 관계자는 “가능하면 당직자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알다시피 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에 나섰고 통합 이후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직자 A씨 계약종료와 관련, “당을 짊어 만들어보자는 차원이 있지 ‘반대파 제거’라는 의혹제기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달 계약 만료 당직자 2명 중 다른 1명은 계약이 연장됐는데, 이 인사는 안 대표 측으로 분류되는 만큼 호남 출신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안 대표의 ‘반

통합과 제거’ 작업이 시작됐다며 다소 격양된 분위기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에서 호남의 원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호남계 당직자 또는 통합에 반대하는 당직자들 안 대표가 품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당직자는 “당직자 A씨의 경우 대선 경험을 비롯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으로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A씨 계약종료의 경우 사무총장보다 더 앞선에서 결정했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 주도로 10월, 12월 2차례에 걸쳐 중앙당 실국장급 당직자 16명을 시·도당으로 내려보내고 그 자리를 여태 비워둔 것에 대해서도 굽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앙당 당직자 파견 명분은 시·도당 역량강화라고 내세웠지만 실은 안 대표 측 진정체제 구축을 위한 정치작업이라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전후로 공석 중인 중앙당 실국장 자리에 안 대표 측 인사들이 중점 배치될 것이라는 말도 무성하다.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국민·바른정당 통합해도 12.8%…시너지 효과 미미

리얼미터 여론조사…민주당 47.4% 자유한국당 17.8%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도 정당 지지율 상승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일 전국 성인 20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2%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바른정당이 하나로 합칠 경우를 가정한 ‘신(新) 정당구도’에서 통합정당의 지지율은 12.8%로 집계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47.4%, 자유한국당 17.8%에 이은 3위다. 정의당은 4.3%였다.

통합정당 지지율은 기존 정당구도에서의 국민의당(6.8%)과 바른정당(5.6%) 지지율을 단순히 더한 12.4%와 비교해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통합에 따른 시너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당이 통합할 때 이탈파 의원들이 정당 또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3.5%의 지지를 받으면서 이탈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는 유권자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지지율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 49.0%, 한국당 20.6%, 국민+바른 통합당 11.1%, 정의당 5.3%로 나타났다. 한국당의 경우 ‘신(新) 정당구도’ 지지도 대비 2.8%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이 그 다음으로 1.6%포인트, 정의당이 1%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국민+바른 통합당은 1.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현재 여론조사에 어느 성향의 표심이

가장 많이 숨겨져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중도’라는 응답이 28.5%였고 ‘보수’는 28.0%였다. 반면 진보라고 답한 비율은 14.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이 진보’보다는 ‘사이보수’의 비중이 더 크다는 뜻이다.

내년 6·13 지방선거가 선거연대를 통해 여야 1대1 구도로 치러질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서는, 민주당·정의당 연대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9.0%였던 반면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연대는 24.3%로 나타났다.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한 문항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 심판’이라는 응답이 59.2%였다. ‘문재인 정부 무능·실정 심판’이라는 의견은 27.5%였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희호기자 khh@kwangju.co.kr

성명서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대책'은 바다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어민들에 대한 사형선고다.

대한민국 바다는 사망선고를 받았고 어민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다. 죽는 것은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힌 138만 수산인 뿐만이 아니다. 대대로 누리고 향유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를 빼앗긴 모든 국민들의 삶이 고사하고 말 것이다.

2004년 정부 종합대책 그대로 답습한 기만행위

2017.12.28 발표된 정부의 '골재수급 안정대책'은 지난 2004년, 겉으로는 모래대란 운운하며 뒤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긴 건설업계의 여론몰이에 떠밀려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그대로 답습한 어처구니 없는 기만행위의 결정체다.

당시 정부는 장기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바닷모래 채취가 해안침식, 어족자원 고갈 등 국토를 훼손하고 국민 전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설업계와 수산업계의 갈등의 문제로만 축소한 채 고작 6페이지 분량의 골재수급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할 바 되었다.

2004년 이후 사후관리 없고, 마구잡이식 바닷모래 채취 더 부추겨

하지만 그 이후 바닷모래 채취구역은 남·서해 바다적경정제구역(EEZ)으로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 모든 개발행위에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복구의무마저 면제해 마구잡이식 바닷모래 채취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영향평가협회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요식행위로 전락한 지 오래며, 골재 공급된다면 10년 넘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당초 대책용으로 파악되었던 바닷모래는 이제 아파트, 골프장을 짓는 데 쏟아 부어지며 민간 건설, 골재업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다.

138만 수산인의 한해한 절규 외면, 건설업계 모래대란 국민 호도

이처럼 긴 시간 지켜이 쌓인 적폐들이 붕괴 타격을 쏟아지는 2017년 겨울 한복판에서 정부는 또다시 건설업계와 수산업계의 갈등으로만 치부하고 어민과 138만 수산인들의 한해한 절규에 귀를 닫은 채 13년 전과 똑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다.

마지 13년 전으로 그대로 돌아간 것처럼 제도개선과 환경영향 최소화, 상생발전 운운하며 우리 수산인들을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우롱하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또한 모래대란을 다시기 위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우리 수산인들을 무시해도 되는, 잠시 억누르지만 하면 되는, 감언이설로 달래기만 하면 되는 어리석은 존재로 치부할 생각인가?

연 27조원 부가가치 창출 수산산업 벼랑 끝 세우고 사형선고 내린 만행

우리 수산업이 어족자원 고갈,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연안 발전소 및 해상풍력 건설 등 벼랑 끝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부 발표는 사실상 바다에 사망을 선고한 것이고, 정부가 어민과 수산인들을 차디 찬 바다에 수장시키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천인공도할 만행이다.

고작 일부 건설·골재업자의 몇백억 이익을 위해 27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 수산인들을 희생시킨다는 게 말이 되는가!

바닷모래 채취는 수산인 생존의 문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까지 훼손 행위

바닷모래 채취는 건설업계에게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우리 수산인에게는 죽고 사는 생존의 문제로 결코 조정되어야 할 갈등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고 앞으로 후손에게 전해줘야 할 소중한 해양환경, 풍요로운 어장의 소중한 가치를 극소수 민간 건설 골재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파괴하는 것은 상식적인 정부에서는 행할 수 없는 부조리의 결정체다.

언제까지 극소수 골재채취업자의 이익을 위해 모든 국민이 희생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극도의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정책을 허용할 수 있던 말인가?

훼손된 해양환경 선복구, 과학적 영향조사 실시와 바닷모래채취 전면 중단 요구 미수용시 모든 해역에서 어업생산 중단 불사

우리 138만 수산인들은 죽을 각오로 이번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부 대책을 전면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바다 모든 채취해역에서 이미 훼손된 해양환경의 선복구와 바닷모래채취 피해영향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과학적 조사 실시,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닷모래 채취의 전면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언제 삶의 터전을 잃게 될지 모를 우리 138만 수산인들은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해역에서의 어업생산 중단을 비롯한 그 동안의 무시와 멸시의恨을 반드시 토해내고 말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